VISION 12

정치·행정 서비스

국민을 소중한 고객으로 모시겠습니다.

신뢰받는 정치, 봉사하는 행정

42 국민과 기업, 섬기겠습니다.

'행정은 섬김의 자세로'

- 알·깨·유 정부(알뜰하고 깨끗하며 유능한 정부)
-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공기업 민영화
- 우정사업의 공사전환, 철도사업 경쟁력 제고
- 미래대비형 전략기능 중심 정부구축
- 유사중복기구 통·폐합
- 성과 중심 정책평가와 결과 반영
- 재정개혁 촉진
- 규제일몰제 및 규제심사 시스템 도입
- 세무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

43 재난 및 안전관리 · 응급의료시스템, 선진화하겠습니다.

'24시간 국민보호'

- 응급의료시스템 확충
- 재난 예방·복구·사후관리의 전문화
- 문화재 관리 일원화와 문화재 방재시스템 강화

44 법과 질서, 회복시키겠습니다.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사회'

- 공직자 부패 척결
- 국민생활편익 우선의 공권력 집행
-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률지원체제 강화
- 불량식품·어린이 유괴·부녀자 납치 등 가정파괴 강력범죄 예방체계 구축

VISION 12

정치·행정 서비스

목표 42

국민과 기업, 섬기겠습니다.

'행정은 섬김의 자세로'

알·깨·유 정부(알뜰하고 깨끗하며 유능한 정부)

방만한 재정, 중복되고 불필요한 지출은 국민의 혈세인 세금을 지나치게 낭비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 국민과 기업을 섬기는 정부로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모든 정부분야에서 혁신을 통해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정부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 알뜰하고 깨끗하고 유능한 정부를 만들겠습니다. 중앙정부조직의 비대화를 막고 유사·중복기능의 확대와 자문기구의 무분별한 설립을 막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유사·중복되는 정부기능을 통폐합하고 불필요한 각종 위원회를 재정비해야 합니다. 정부관련 재정을 개혁하고 성과 중심의 정책평가를 통해 정부에 대한 국민의 평가를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공기업 민영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포함한 공공부문은 정부부문보다 크고 점점 비대해지고 효율성은 저하되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24개 주요 공기업의 부채는 74%, 임직원 수는 64% 늘어났습니다.

■ 공공기관 지배구조를 개선하겠습니다.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기관의 기관장 등 임원으로 전문성을 갖춘 역량있는 인사가 선임될 수 있도록 임원선임제도를 정비하고 낙하산 인사의 연결고리를 해체하겠습니다. 사장 등 기관장 실적책임제, 경영성과계약제 등을 도입하고 감사제도를 정비하겠습니다.

■ 민영화 효과가 큰 공기업부터 단계적으로 민영화하겠습니다. 시장경쟁을 통해 효율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영역의 공기업에 대하여 민영화를 단계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기반 시설은 공기업이 운영하되, 민간과 경쟁관계에 있거나 설립목적을 상실한 공기업은 민영화 검토 대상으로 선정하겠습니다. 민영화 방안으로는 지분을 매각하는 방식, 지분은 국가가 보유하되 경영만 민영화하는 방식 등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겠습니다.

■ 공공기관의 예산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정부출연연구기관, 재정지원 기관 등 공공기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재검토하겠습니다. 유사기능의 기관들을 통·폐합하고 공공기관의 기능과 영역을 정비하겠습니다.

(FQ)12한 나라 본 책(364~385) 2008.3.29 6:12 AM 페이지368 western

우정사업의 공사전환, 철도사업 경쟁력 제고

정부기관의 민영화 · 공사화는 효율적이지 못한 시스템을 개선시켜 주고 운영능력을 최적화, 조직을 슬림화 한다는 차원에서 이미 많은 선진국에서 추진하는 과제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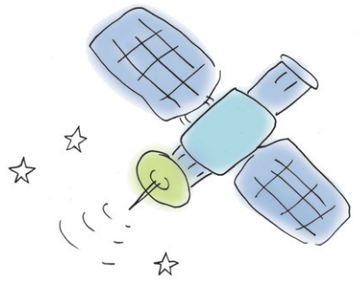
특히 국가인프라산업으로 구축되었던 철도사업, 우정사업에 대한 민영화는 국가적인 과제로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 우정사업을 정부에서 공사로 전환하고 철도사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겠습니다. 정부가 운영하는 우편, 우체국예금, 우체국보험은 공공성과 기업성을 조화롭게 관리하면서 정부 부처형 조직에서 공사로 전환하겠습니다. 공사화를 통해 보편적 서비스를 지속하면서 재정적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의 기능을 조정하고 경쟁체제를 도입함으로써 사업적자를 줄이고 철도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미래대비형 전략기능 중심 정부구축

반복되는 각종 행정실수와 착오, 그리고 사고후 방지대책 위주의 행정체계를 개선해야 합니다. 선진행정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과거의 관행과 틀에서 벗어나 미래대비형 정부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 앞으로 정부의 기능은 미래 대비형 전략기능 중심으로 구축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R&D, 기초학문, 교육 · 건강증진, 환경보호, 재해예방 등에 정부의 기능을 집중 투자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운영도 자유 · 공정경쟁 · 책임을 기본으로 하며 위기관리에 대한 해결능력을 증진시키며 법치주의를 강화하겠습니다.



(FQ)12한 나라 본 책(364~385) 2008.3.29 6:12 AM 페이지 370 western

유사중복기구 통·폐합

노무현 정부는 위원회로 시작해서 위원회로 끝난 '위원회 공화국'이었습니다. 노무현 정부 출범 당시 386개였던 정부산하 각종 위원회는 정권 말기인 2008년 2월 416개에 이르렀습니다. 이들 위원회의 상당수는 존재 자체가 의문시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는 각종 위원회의 목적, 기능 및 업무 범위가 기존의 정부조직과 중복되었고, 위원회의 인력 및 예산 운용 역시 방만하게 이루어진 데서 기인한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 중장기 국정운영의 기획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위원회 등 옥상옥 기구를 통·폐합하겠습니다. 경제정책 총괄 조정기능을 강화하고 교육·인력개발 기능과 연계하며 산업 관련 업무기능과 인프라 중심체제로 전환하겠습니다.

성과 중심 정책평가와 결과 반영

정부의 조직·예산·인사교류와 관련한 방만한 편재와 운용에 있어서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한편, 일부 공기업은 공기업 제품 품질보증제 등의 도입을 계기로 조직·예산·인사 등의 영역에서 많은 경영혁신 성과를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기업의 성과를 정부의 정책평가에 적용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 공기업 제품 품질보증제의 도입으로 고객만족지표 개발(예 : ISO 9000인증 등)을 정부평가에 활용하여 정부의 조직·예산·인사교류에 반영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겠습니다.



(FQ)12한 나라 본 책(364~385) 2008.3.29 6:12 AM 페이지 372 western

재정개혁 촉진

글로벌 경쟁시대에 각국은 우수한 인적·물적 자원 확보를 목적으로 소득세율 등을 경쟁적으로 인하하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와의 조세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소득세 부담을 줄이는 등의 재정개혁을 촉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 재정개혁과 재정건전을 위해 국민부담을 경감하는 방향으로 세제를 개편하고, 낭비·중복되는 지출을 방지하며, 예산사업의 효율을 극대화하고 국가채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규제일몰제 및 규제심사 시스템 도입

투자활성화 → 일자리 창출·내수회복 → 성장잠재력 확충 → 경제성장의 선순환구조의 복원이 시급합니다. 따라서 기업의 투자와 고용 확대에 도움을 주는 행정서비스체제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합니다.

■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국무총리실, 각 부처 및 지자체가 유기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규제개혁시스템을 정비하겠습니다. 각종 규제개혁 법령도 정비하여 포괄규제의 일괄처리 근거를 마련할 「규제개혁촉진법」(가칭)을 제정하고 의원입법규제심사시스템을 도입하고 규제법률주의 실현 및 규제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행정규제기본법」을 전면 개정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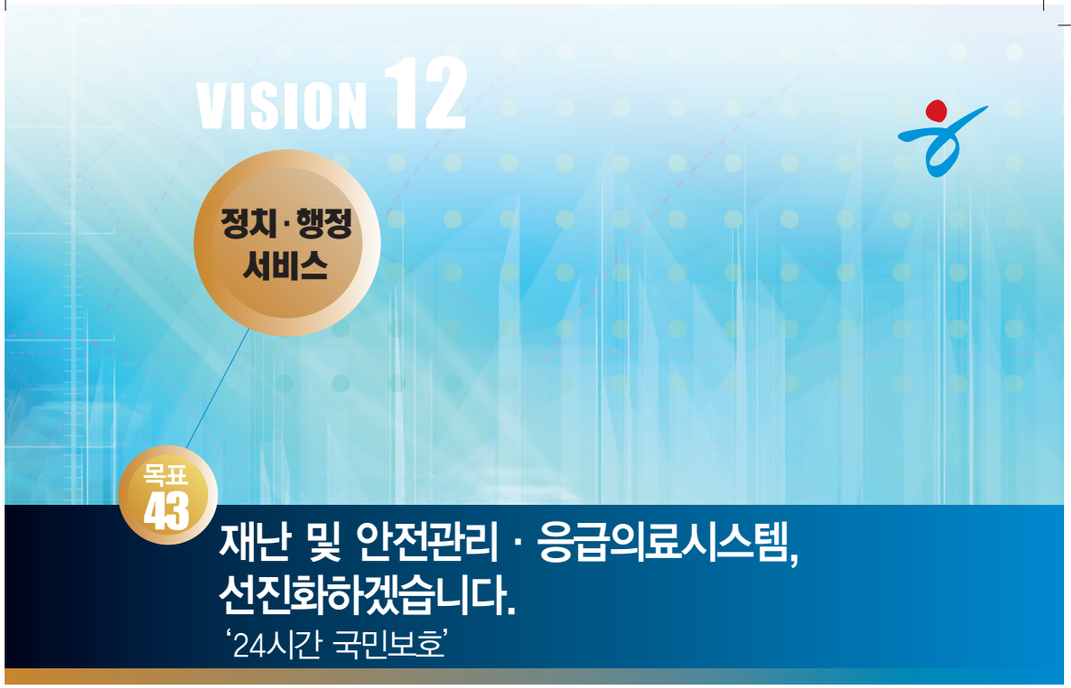
■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포지티브(Positive) 규제에서 네거티브(Negative) 규제로 전환하겠습니다. 규제일몰제(Sunset Law)를 도입하고 규제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규제절차의 매뉴얼(rule book)을 도입하겠습니다.

세무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

국민의 조세부담률이 높아지면서 공평과세 및 납세자 권익, 세정의 투명성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납세자의 권익에 영향을 미치는 세무조사의 객관성, 공정성, 투명성이 미흡하여 세무조사권 남용 등이 이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 민간전문가, 관련 부처 공무원이 참여하는 국세행정옴부즈맨제도를 도입하여 공평하고 투명한 국세행정을 지향하고 납세자의 권익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하겠습니다.

- 세무조사 절차 및 조사대상에 대한 기준을 법령에 명확히 규정하겠습니다. 법령에 따라 조사대상자를 선정함으로써 자의적인 세무조사를 지양하고, 일반세무조사 시 세무조사 선정의 구체적 이유 등을 조사대상자에게 의무적으로 통보하는 등 세무조사의 객관성·공정성 및 투명성 강화를 통해 납세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장하겠습니다.



응급의료시스템 확충

선진화된 응급의료체계의 구축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사회안전망 확립의 기본적 요소입니다. 응급·재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선진 응급·재난대응시스템을 조기에 구축하겠습니다. 응급의학 전공의사 정원의 단계적 확대 및 정원 충족률 제고를 위한 지원방안이 필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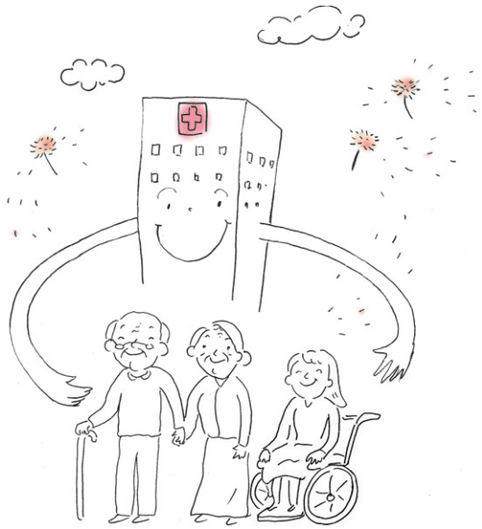
- 119 응급 및 재난 구조시스템을 확충하겠습니다.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첨단 응급·재난 의료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응급의료체계에 우선적으로 유비쿼터스 U- health를 도입하여 응급진료정보망 및 응급환자 등록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응급환자 이송정보망을 추진하여 전국 네트워크와 연계하고 원격응급진료시스템 도입

(FQ)12한 나라 본 책(364~385) 2008.3.29 6:12 AM 페이지 376 western

을 추진하겠습니다.

■ **응급·재난의료의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헬기, 응급구조용 오토바이(퀵119) 등 다양한 형태의 구급의료 이동수단을 개발하고 확보하겠습니다.**

■ **주요 응급질환에 대한 증상 및 발생 시 행동요령과 심폐소생술, 응급구조법 등 응급의료에 대한 대국민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자동제세동기(AED), 심폐소생에 필요한 장비 등 다중이용시설에 구급의료용품 구비를 강화하겠습니다. 16개 시·도 권역별 응급의료센터에 필수 응급의학 전공의를 확보하고 응급의료수가를 현실화하겠습니다.



재난 예방·복구·사후관리의 전문화

재난관리업무를 국가적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재점검해야 합니다. 정부의 모든 부처에서 기본적인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부처별 시설물별 분산적으로 이루어져 사고발생시 기관간 책임소재가 불명확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풍수해와 대형 화재 등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방안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숭례문 화재 사고는 국민의 높은 안전요구에 비해 턱없이 미흡한 재난 예방 및 대응수준을 보여주었습니다.

■ **재난 예방·대응·복구 분야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는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모든 재난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대비·대응 분야를 일원화하여 전문성 있는 조직으로 운용하겠습니다. 문화재 화재, 지하상가 화재, 고층건물 화재, 다중이용시설 화재 등 가능성이 있는 곳에 대한 화재예방대응매뉴얼을 세부적으로 마련하고 지휘체계를 재정비하겠습니다. 문화재를 포함한 주요 공공시설물의 재난시설물 정보를 시설물관리와 재난관리기관간에 공유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 **응급 및 대형사고 시 소방력 긴급투입 및 현장지휘권 확립 시스템을 강화하겠습니다.** 중앙재난통제단장(소방방재청장)과 지역재난통제단장(시·도 본부장)간의 일사불란한 지휘체계를 구축하며 기동성있는 구조장비(헬기, 고가 사다리, 구급용 오토바이 등)를 신속하게 제공하겠습니다.

(FQ)12한 나라 본 책(364~385) 2008.3.29 6:12 AM 페이지 378 western

문화재 관리 일원화와 문화재 방재시스템 강화

현재 문화재청과 지방자치단체로 문화재관리가 이원화되어 있어 재난사태에 대한 책임이 불명확합니다.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통합적 관리체계가 미흡하며 관리전문가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문화재 관리에 대한 상시감독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24시간 감독시스템 확보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주체와 관리주체를 문화재청으로 일원화하겠습니다.** 2009년까지 기존 문화재연구소를 서울청 · 중부청 · 경상청 · 전라청 등 지방청으로 개편하고 2011년까지 시 · 도별 지방청을 확대하겠습니다.

- **문화재청에 소방전문 기술자를 배치하여 문화재 화재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현재 문화재청 문화재 안전과에는 화재 전문가가 전무한 상태로 전기 · 기계분야 전공자가 화재위험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개선하여 전문인력으로 대체하겠습니다.

- **중요 문화재에 대한 야간관리체계를 상시적으로 굳히고 상근 인력을 확충하겠습니다.** 국보, 보물, 사적 등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 409개소에 평균 2명을 배치하고 이를 위한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겠습니다.

- **중요 문화재에 대한 첨단 방재시스템을 조기에 구축하겠습니다.** 화재 발생 시 정보설비장치나 스프링클러, 미세분무설비 등이 자동으로 작동, 통보되는 첨단보안시스템을 구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보, 보물, 사적 등 중요 목조문화재에 첨단보안자동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충분한 예산을 투자하겠습니다.

- **문화재 보호 시민단체 등을 연결하여 전국민이 함께 문화재를 관리하는 네트워크(가칭 문화재119)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비영리 시민단체의 문화재 보존 및 문화유산에 대한 교육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VISION 12

정치·행정 서비스

목표 44

법과 질서, 회복시키겠습니다.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사회'

공직자 부패 척결

공직자 부패 및 비리로 초래되는 검은돈과 낭비되는 눈먼 돈, 세금으로 제대로 걷히지 않고 새는 돈을 추방하지 않고는 경제성장과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없습니다. 특히 공무원의 재량권 행사가 가능한 계약, 세무조사, 인허가, 지도단속 등 민원업무에서 부패와 비리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직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과 강력한 처벌이 정착되어야 합니다.

■ 부패유발 원인을 제거하고 민원전담공무원을 배치하겠습니다. 방만한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고 공무원의 재량권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겠습니다. 주요 발주사업에 대하여 최저가낙찰제를 확대 적용하고 계약심사제를 강화하겠습니다. 민원관련 상담·접수·소관부서 배분·결과통보 등 원스톱 처리를 위한 민원전담지원관을 설치하여 민원처리단계 및 기간을 대폭 줄이고 민원인과 담당공무원이 직접 대면하는 기회를 차단하겠습니다.

■ 부패사범적발시스템을 활성화하겠습니다. 건설·건축, 세무, 수사·법조, 보건·위생, 조달 등 부패취약분야에 특별감찰단을 구성하여 부패사범을 적발하고 고질적인 관행비리, 지역토착비리 등이 적발되면 해당 기관장과 감사관을 문책하겠습니다.

■ 고소득 탈세범에 대한 적발과 처벌을 강화하겠습니다. 조세체계를 개선하여 세금탈루를 방지하고 고의적 탈세에 대한 가산세율을 현행 40%에서 100%로 인상하여 엄정한 조세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고소득 전문직 세금 탈루범들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자영업자의 신용카드·현금카드 사용을 의무화하겠습니다.

■ 청렴문화를 확산하겠습니다. 민·관·시민사회·기업 등이 동참하는 투명사회협약의 계도운동을 활성화하여 사회적으로 청렴문화를 확산하겠습니다. 건전한 내부고발자 및 공익침해 신고자에 대한 보호와 보상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민원업무 공무원단에 청렴마일리지제도를 운영하여 우수자에게 포상과 인사에 가점을 제공하겠습니다.

(FQ)12한 나라 본 책(364~385) 2008.3.29 6:12 AM 페이지 382 western

국민생활편익 우선의 공권력 집행

'매 맞는 경찰, 쓰러진 공권력' 등 불법집회 및 극렬시위에 대한 무기력한 법 집행으로 소요된 연간 사회비용은 12조 3,190억 원이며 시위진압 경찰 부상자 수는 최근 3년 평균 700~800여 명, 차량피해는 165대나 됩니다. 법의 지배체제 확립의지를 강화하고 집단이기주의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으로 시위문화 선진화 및 산업평화를 정착시켜야 합니다.

■ **국민생활 편익 증진 위한 공권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불법집회 및 시위로 인한 국민생활 방해행위에 대하여 주동자에 대한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책임을 묻는 엄정한 법 집행을 하겠습니다. 폴리스라인 준수 계도 및 위반자는 엄하게 처벌하겠습니다.

■ **불법시위 및 기초질서 위반사범에 대하여 엄격한 법적 기준을 적용하겠습니다.** 훈방조치 대신 즉결심판제도를 활성화하여 사법처리의 실효성 제고 및 법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 **적법한 집회에 대해서만 표현의 자유를 적극 보장하겠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차원에서는 시위가 빈발하는 국회 등 인근 지역 2~3곳에 상설시위구역을 시범 설치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형법」, 「경범죄처벌법」, 「도로교통법」, 「식품위생법」, 「공직자윤리법」, 「부패방지법」 등 각종 관련 법규 등을 강화하겠습니다.

■ **새 정부 출범 1년내에 확고한 '법의 지배' 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반사회적 범죄에 대한 법정 최고형을 집행하겠습니다. 아동유괴·납치, 성범죄 등 가정파괴범과 맹독성 식품 판매, 유통기한 변조 등의 식품관련 범죄로 가정의 행복과 사회기초질서를 파괴하는 민생사범에 대해서는 초범이라도 실형위주의 법정 최고형을 집행하겠습니다.



(FQ)12한 나라 본 책(364~385) 2008.3.29 6:12 AM 페이지 384 western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률지원체제 강화

사회적으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영세사업자와 무주택 서민층 등이 경제생활을 영위하는 데 법률적 배려가 필요합니다. 또한 헌법의 평등이념에 따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정부 차원의 지원과 대책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 **서민의 임차권 보호를 위한 법령을 개정하겠습니다.** 영세사업자의 부담완화를 위해 소규모 점포의 임대료 상한을 축소하겠습니다. 무주택 서민층의 보호를 위해 주택경매시 전세금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확대하겠습니다.

- **형사판결에 부가되는 사회봉사명령 집행시 서민생활을 배려하겠습니다.** 사회봉사활동영역을 확대하여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겠습니다.

- **헌법의 평등이념을 구현하는 차별금지 법안을 제출하겠습니다.** 성별 · 연령 · 인종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차별중지 명령 등 실효성 있는 구제제도를 만들겠습니다.

불량식품 · 어린이 유괴 · 부녀자 납치 등 가정파괴 강력 범죄 예방체계 구축

어린이와 부녀자를 상대로 한 반인륜적 강력범죄가 날로 흉악해지고 있어, 이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식품관련 범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반인륜적 강력범죄와 사회기초질서 위반범죄를 근절하는 고강도 처방이 필요합니다.

- **아동유괴, 부녀자 납치, 성범죄 등 가정파괴범에 대해서는 사형, 무기징역 등 법정 최고형으로 엄벌하겠습니다.** 실종사건 수사전담팀 신설 및 전문수사요원 양성, 취약지역 도로 검문 및 공원 · 놀이터에 감시카메라 설치 강화, 성폭력 범죄자의 유전자 정보데이터베이스화를 추진하며, 사건현장 중심의 철저한 수사 지휘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 **맹독성 식품 판매, 유통기한 변조 등의 식품관련 범죄로 사회기초질서를 파괴하는 민생사범에 대해서는 초범이라도 실형위주의 법정 최고형을 집행하고, 해당 식품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한 민·형사상의 처벌을 적용하겠습니다.**